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칼럼,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 일부분 내용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박근혜 정권의 고위관료와 새누리당, 재벌, 보수층에는 친일파 후손이 많다. 그들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조상의 친일 행각을 지울 절호의 기회이다. 친일파 후손이라는 일생의 멍에를 벗고 팔다리 쪽 펴고 살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국정화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들이 반민주, 반헌법, 반역사, 불법, 다수 국민 반대, 국정 운영 등 어떤 것이든 희생시켜도 좋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개인의 불편한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마저 “역사는 절대로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던 과거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지만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한국의 이같은 희극적 상황이 전개될 것을 70년 전에 내다본 사람이 있다. 마지막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이다. 그는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뒤 “우리 일본은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라는 섬뜩한 저주의 말을 남겼다(이상각 <1910년, 그들이 왔다>). 역사는 성찰하는 거울이다. 가깝게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나치 희생자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모든 독일 국민은 일어설 수 있었다. 국가든 정권 이든 역사를 지우는 게 아니라 직시하고 참회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역사를 덧칠하는 나쁜 사례를 우리는 일본 아베 정권에서 본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아베 정권을 따라가고 있다. 언어를 오염시키며 세상을 이간질하고 뒤흔들고 있다.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를 현실화하려는가.”

○...“승리를 100% 확신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지하러 왔어요. 두고 보면 분명 야당이 이길 겁니다.”

유권자의 말이었다.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실시된 자유총선에서 민주화 운동 기수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에서 반세기 가량 지속된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치 측 대변인은 “우리는 전국 70% 이상에서 앞서고 있다”면서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수치 여사는 지난 27년 동안 가택연금 등 온갖 수난을 겪으며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상징적 존재다.

○...“저축 여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 외 소비 지출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jtbc와 인터뷰한 윤기림 재무컨설턴트의 말이었다. 지난해 전국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5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일정 보증

금을 내고 월세를 사는, 이른바 '반전세'도 크게 늘고 있다. 서울의 반전세 비중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32%로 뛰었고, 경기도 역시 1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딱히 대책이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어제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이슈 인터뷰'코너에 나와서 "병무청, 검찰, 법원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병역비리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가 허구라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해줬다"고 강조하며, "(강용석 측)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신채검사를 받았고, 병역비리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강용석 이) 국회의원을 그만 둔다고 해서 정말 그만두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심경을 털어냈다.

■ 김용민의 새책 많은 관심 바랍니다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 관심 바랍니다.

- 예스24 <http://goo.gl/ndhoaj>
- 알라딘 <http://goo.gl/AkxzHD>
-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 인터파크 <http://goo.gl/tvdp7E>
- G마켓 <http://goo.gl/HDXKo1>

■ 제공

-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 차과장중고차 010-5556-6885
-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 문의] kimyongminpd@gmail.com

[국민일보] [이슈분석] 中·대만은 ‘하나의 중국’ 재확인했는데... 국제사회 ‘두개의 한국’ 굳어지나

우리 민족공동체의 앞날에 대해 고민할 의제를 던지는 국민일보 1면 기사 눈길을 끈다. 중국과 대만이 66년 만에 역사적인 양안(兩岸)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은 하나’임을 재확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며칠 전 합의가 그렇다.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도 유사하다.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남북은 분리된 두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유엔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아 국제적 효력이 없다. 한미FTA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을 제대로 불식하지 못하면 통일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측의 관할권을 인정받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남북합의서에 기초한 남북 관계 특수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이 필수적이다.

[경향신문] 1973년에도 오류투성이 '벼락치기 교과서'

확정 고시 이후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두 번째 스텝인 집필진 모집이 끝났다. 25명 정도라고 하는데 명단 공개는 안 하겠다고 한다. 거기에 누가 들어갔는지 궁금하다. 온통 졸속이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1973년 6월23일 박정희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후 '벼락치기'로 만든 국정교과서라며 그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화 방침 발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이듬해 3월부터 새 국정교과서는 학교 현장에 배포됐는데 교육현장에서 발견한 오류들이 속출하자, 문교부는 그해 4월 전국 112개 학교를 선정해 현장교사들에게 한 달간 오·탈자 등을 잡아내도록 했다. 기본적인 교정 작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정교과서가 나왔던 것이다. 내용적 오류를 보면, 한 예로 신라 '화랑도'의 기원을 중화 교과서는 '귀족사회'로, 고교에선 '씨족공동사회'로 표현했다. 동학농민운동·해방 등 역사적 사건 해석도 학교 급별로 차이가 컸다. 이게 당연하다.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문재인, 부산 영도 출마 결심" ... 김무성과 맞대결하나

오늘은 정치권 소식에 비중을 두려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 때 부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이 말했다. 지역구는 영도구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문 대표가 부산 영도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며 "최근 문 대표의 측근 2~3명이 영도구에서 지역구 관리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다. 문 대표가 영도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내년 총선 최대의 박매치가 이뤄지게 된다. 김 위원장은 "문 대표는 초·중·고교를 영도에서 나왔고 지금도 본가가 있다"며 "차기 대선주자끼리 대결하면 주목도가 높아져 전체 총선 구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주변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 대표는 지난 9월 당 혁신위가 부산 출마를 요청하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표 측은 "부산 출마는 호남 민심 이반을 돌파하는 정공법 차원"이라고도 했다. 문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호남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난 대선 때 문 대표를 지지했던 호남은 결국 새누리당 표를 뺏어올 수 있는지 여부와 헌신을 중시하는 만큼 부산 출마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는 문 대표가 부산 출마를 선언하면 당 지도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고 짚는다. 본인의 지역구 승부에 매달려야 하는 만큼 전국선거를 지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산 출마는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 성격의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거나 '통합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당내 중도 및 비주류 의원들의 요구에 결과적으로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계파 간 '공천 나눠먹기' 형태의 통합선대위 구성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0.1%라도 지지를 받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선대위는 꾸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대위와 별도로 '문재인·안철수·

박원순' 연대가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구도를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 주장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했던 바.

[중앙일보] '박근혜 사람들' 대구 몰려든다

대구 물갈이론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눈에 띄게 '박근혜의 사람들'이 대구로 몰려들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외에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버젓이 있는 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구 북갑 권은희 의원 지역구에선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대구 중·남 김희국 의원 자리에도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인선 전 경북 부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동을에선 이재만 전 구청장이 뛰고 있고 박 대통령의 출신 지역인 대구 달성에도 광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현역 의원이 친박계와 거리가 먼 지역구에 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10여 명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공천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조선일보] [사실] 대통령 측근들, 어떤 정치 세력 만들겠다고 이런 처신 하나

TK 물갈이론과 관련한 기사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조선일보 사실 일부 인용하고 가자.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내각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이처럼 대구모로 총선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4대 개혁과 국정교과서, 경제 문제 등 국정 현안 처리에 최우선을 둔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선거 관리의 책임을 진 행자부 장관과 경제 분야 핵심 장관들까지 총선으로 들쭉거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인사 때마다 좁은 인재풀과 잇단 검증 실패로 국민을 실망시켰던 청와대가 이번엔 총선용 '누더기 개각'으로 국정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청와대는 그간 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재가나 묵시적 동의 없이 이렇게 너도나도 출마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종섭 장관은 '총선 출마는 내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답변해야 할 사안이란 말인가. 세간에는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퇴임 후 정국까지 감안해 친위(親衛) 세력 구축에 나섰다는 말이 나돈다. 청와대와 대립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을 물갈이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측근들이 출마하려는 지역은 대구·경북, 그중에서도 친(親)유승민계 의원들의 지역구가 많다.

대통령 측근들이 호남까지는 아니라도 수도권이나 충청·강원 등 여권의 약세 지역에서 출마한다면 그나마 '외연(外延) 확장'이라는 명분은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측근은 '공천=당선'인 지역에서 대통령 개인의 후광(後光)을 업고 손쉽게 당선되려는 의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중심으로 텃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지극히 협량(狹量)한 정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다.

[동아일보] 유승민 키즈 다 죽는다고?... 그런 말 하면 다리 뿌라뽀다"

그러면 앞서서 당할 유승민이냐. 아니다. 동아일보 기사 주목해 보자.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빈소를 찾아온 손님을 직접 접객실까지 나와 맞이한 건 딱 5번뿐이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였다. 그

만큼 유 전 원내대표가 신경을 많이 쓴 조문객이었다는 얘기가. 반면 원유철 원내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의 기류는 조금 냉랭해 보였다. 원 원내대표가 접객실에 머무는 50분 동안 유 전 원내대표는 접객실로 나오지 않았다.

유 전 원내대표의 빈소 풍경은 현재 여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빈소에서 유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를 촉발한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과 ‘대구경북(TK) 물갈이’설이 화제가 됐다. 곳곳에서 청와대 인사들의 대구 출마설을 거론하며 공천 문제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유 전 원내대표는 빈소에서 “빠 있는 농담”도 했다.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에게 “유승민 키즈(kids·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뜻)는 다 죽는다고 말하고 다니느냐”며 “그런 얘기고 다니면 다리몽둥이를 뿌라 뺐다(부러뜨린다)의 대구 방언”고 말했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지만 물갈이 전략공천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조선일보] 우리가 차대통령 위해 열심히 했는데… 우짜다 이래됐노

빈소에 들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유 의원과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내가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할 때 승민이는 대표 비서실장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술을 마시러 가도 승민이는 밤새 보고서를 써 박 대통령에게 올렸다”며 “우리가 박 대통령을 위해서 참 열심히 했는데… 우짜다 이래 됐노”라고 했다. 유 의원을 정계에 입문시킨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았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청와대 차원의 문상 계획에 대해 “의원 상(喪)에 누가 간 일은 없다. 전례가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단독] ‘김무성 사위’ 보름 변론에 5000만원… 최고일, 회사 돈 받아

15차례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 모 씨의 변호를 맡은 최고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착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이 씨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S개발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무성 사위의 부친이 운영하는 S개발은 지난해 12월 29일 김무성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변호인 착수금으로 최고일 변호사에게 수입료 4500만여 원과 관련 세금 등 총 5000만 원을 입금했다. 최 기요일 변호사는 김무성 사위가 구속되기 직전인 11월 19일 변호인에 선임돼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12월 5일까지 보름 남짓 변호인을 맡았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 기록은 전산 입력되는 법원 사건진행 기록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최고일 변호사가 김무성 사위 사건의 착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은 대법관이나 고검장급 검찰 간부 출신 고위 전 관들이 받는 통상적인 착수금 2000만~3000만 원 선보다도 높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고일 변호사의 해명대로 검찰을 찾아가 김무성 사위의 정상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등의 특별한 변론 활동을 한 게 없다면 수입료의 성격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변호사 수입료의 출처가 S개발 법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불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무성 사위 개인 형사사건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김무성 사위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S개발 법인이 송금했기 때문이다. S개발 등기부에 따르면 김무성 사위는 S개발 지분 25%를 보유했지만 등기부상 이사로 는 등재돼 있지 않다.

[한겨레] [단독] 검찰 수사관, 피의자에 전화 걸어 구속 언급하며 ‘진술 바꾸라’ 종용

서울중앙지검의 1수사관은 8월13일 저녁 7시쯤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디치과의 1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1차장은 전날 조사에서 유디치과 경영진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다. 1수사관은 “본인이 약한 처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약한 처벌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처벌 수위를 강조한 뒤 “본인이 나올 거라면 이번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 빠르면 9월 정도 해서 구속할 사람 구속하고 사건을 처분하려 한다”며, 사실상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와 기존 진술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1차장이 “주말에는 나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1수사관은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검사님과 저한테 ‘왜 나한테 이런 처분을 하는지’ 나중에라도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그러면서 1차장에게 유디치과로부터 보상을 미리 받아두라는 말도 꺼냈다. 그는 “만약에 구속되고 재판을 받으면 유디에서 보상은 해주겠죠”라며 “(실형을) 1년6월 살았다면 (유디치과가) ‘10억 원 보상해줄게’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다. 또 1차장이 진술을 바꿀 의사를 보이지 않자 “혹시 모르니까 유디한테는 많은 약속을 받아 놔라. 협조하는 대가로 많은 것을 받아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지도 모르니까 (대가를) 미리 확보해 놓아라”고 강조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 검찰이 입법 로비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유디치과만 표적 수사해 기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이게 정상이 아니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사실도 아니고 전화로 구속 등을 언급하며 진술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사한테서 대가를 미리 받아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누리과정 메우느라 교육청 빚 5배로…또 빚내리는 정부

‘보육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마련하라’는 정부에 맞서 시·도 교육청들이 ‘더 이상 빚낼 돈도 없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겨레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내년도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보고한 경기도교육청 등 8곳의 누리과정 예산을 확인한 결과, 8곳 전부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짜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서울시교육청도 어린이집 예산 3807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누리과정 예산 전가에 따른 반발도 크다. 이흥영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에 불법이지만 빚을 내서 메웠지만 정부가 이제는 이런 불법을 일반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최후로는 지방채로 정리하겠다”며 사실상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부모 노조 가입률 높으면 자녀 ‘미래 소득’ 높아진다

노동조합이 자녀세대의 경제적 삶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부모에 비해 노조 활동을 하는 부모의 자녀세대 소득이 더 높았고, 교육·소득 수준이 낮거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부모일수록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자녀세대의 소득 격차가 더 컸다. 지난달 9일 미국진보센터의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교수, 유니스 한 웰즐리대 교수 등이 발표한 '노동조합이 계층 간 이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한편 노조 조직률이 지역 전체 미래 세대의 소득을 올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조 조직률이 10%포인트 가량 늘면 미래 세대의 기대 소득은 3~4.5%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다.

사실 그렇다.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면 기업 이윤이 줄어든다는 주장과 달리, 노조 활성화로 인한 불평등 감소가 오히려 생산성을 높인다고 수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며 "10%대에 불과한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면 소득 불평등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단독] NSA 해킹 우려한 통신 3사, 미 '시스코'에 해명 요구했다

미국 기업 '시스코'가 생산하는 인터넷망 장비 '라우터'를 미국 가안보국이 조작해 인터넷을 도감청 한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와 관련해 SK텔레콤, LGU+, KT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3사가 시스코에 스노든 문건의 진위를 질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정보원·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국가기관이 사실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 적극 대응한 것이다.

[경향신문] 한진해운 - 현대상선 통폐합 안 한다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양대 선사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해운산업 구조조정 3대 시나리오'를 정부 고위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를 통폐합해 국적선사를 하나로 줄이는 방안은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처럼 방향을 잡은 것은 두 회사를 통폐합해도 시너지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데다 안보상 손해도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하면 통합사의 선박량은 161척으로 세계 7위 수준에 그친다. 이는 세계 1위선사인 APM-머스크(590척)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채권단 등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반대가 심해 3가지 시나리오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등 추가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또 대박 터뜨린 한미약품... 1조 원대 비만·당뇨 신약 수출

한미약품이 한국 제약사를 새로 쓰고 있다. 지난 5일 약 5조원에 달하는 당뇨 치료제 기술을 수출한 지 나흘 만에 이번에는 1조 원대에 이르는 당뇨·비만 치료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한미약품의 쾌거는 국내 제약 산업에 대한 관점을 남이 만든 약을 복제해서 파는 저 수익 구조의 '복제약' 중심에서, 실패 위험성도 있고 손실 위험성도 크지만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한 고수익 구조의 '신약' 개발에 나선 힘이였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 중인 옥신토모돌린, 식욕을 줄이는 장 호르몬 기반의 당뇨·비만 치료 바이오 신약에 대해 '타이레놀'로 유명한 글로벌 제약회사 얀센과 개발·상업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 오늘의 날씨

오늘 낮부터 모처럼 맑겠고 서울 한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 선선하겠다. 낮 최고 서울 15도, 대전 15도, 대구 17도가 예상된다. 수능 예비소집일인 내일과 수능일인 모레,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고 수능 한파도 없겠다. 다만 동해안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명수 치유공간 이웃 대표의 한겨레 칼럼 '사소한 분노'를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우리 사회, 권력자의 결정적 허물엔 눈을 감고 연예인들의 실수나 규칙 위반 따위에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결사적으로 참견한다. 사소한 문제를 방관하면 제대로 된 세상이 될 수 없어서 그렇다는 나름의 이유, 말은 좋다. 하지만 그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은 외면한 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꼭 50년 전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고 고백한 시인이 있었다. 그는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만 화풀이하는 자신을 책망했다. 혁명시인 김수영의 고백이어서 무게가 남다르지만 시인의 자책과 요즘의 사소한 분노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성찰이 있느냐 없느냐다.

요즘엔 누가 걸렸다 생각되면 축적된 지식도 자기 위치도 식인 물고기식 비난을 위해서 총동원한다는 느낌이다. 내 속의 찌꺼기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특공대 같다.

지나친 공격성은 만성적 좌절에 대한 리액션일 때가 많다. 만성적 좌절이 아예 국민정서로 굳어진 것 같은 시절이니 공격성의 범람이 의외는 아니다. 문제는 지나친 공격성의 목표가 어떤 '구멍'으로만 향한다는 데 있다. 뺨을 때린 이가 권력자일 경우 거기에 정면대응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적의를 드러낸다. 내가 맞을 때 가만히 있었던 사람, 위로가 어설펠던 사람이 과녁이 된다.

왜 우리 사회는 유독 연예인에게만 엄격하냐는 속설의 정답은 공포의 유무다. 우범지역에서는 차량접촉사고가 나도 시비가 붙지 않는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다. 자칭 고소왕이라는 어떤 변호사의 파렴치함에 진저리쳐도 그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혹시 모를 귀찮은 후환 때문이다.

상습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는 맞을 때의 지옥 같은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가해자의 위치를 선택한다. 자기 공포를 감추기 위한 줄절한 것이다. 혹시 내 분노나 비난이 그런 종류가 아닐까 한번만 멈춰서도 식인 물고기 같은 비난의 광풍은 잦아든다."

만만하지 않은 대상을 향한 분노는 면책된다. 만만한 대상을 향한 분노는 갑질이며 폭력이다. 갑질과 폭력이 없는 11월 10일이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한다.

부정선거 야당탄압 언론압살 세월호참극 서민경제파탄 안보무능 교과서국정화 국민갈등...

우리가 광장에서 만날 이유는 충분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오후 광화문에서